

산재공화국이 아닌

산재예방 선진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에는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사실이 가려져 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있다.



백현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월 25일,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또 다른 모습에는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산재공화국이라는 사실이 가려져 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이 있다. 산재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업 및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는 안 된다”며, “대기업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한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돼 국민을 아프게 하는 중대재해가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며, “사업장 안전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비록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대 속에 출발한 법이지만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산재공화국을 벗어나는 중요한 첫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장의 포괄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의 의미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ESG 경영해야

일터에서의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기업의 전통적 경영 방식은 재무적 가치 즉 수익성을 우선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은 기후변화 영향,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 개발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며, 사회의 경우 인권, 인적자원 관리, 안전/보건, 하도급 거래, 공정경쟁 등이 있다. 지배구조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운영, 감사제도, 윤리경영 등과 같은 요소이다.

사회(S)영역의 경우, 최근 노동자의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노동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기업은 투자자 및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최고경영자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기업이 최고의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ESG경영을 해야 한다.

민간 산재예방 전문기관 역할 강화해야

기업의 ESG 경영에서 민간 산재예방 전문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장의 포괄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민간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기관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IT, Io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재예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기업의 ESG 경영과 함께 정부, 노동계, 산재예방 민간기관이 산재예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에서 벗어나 OECD 국가 중 최고의 산재예방 모범국가가 될 것이다. ☞